

社說

6월 국회 민생법안 빨리 해결하라

6월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애초 기대했던 민생국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보류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중점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계약 불공정을 해소하는 프랜차이즈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이용 법안(FIU)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표적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 관련 법안도 쟁점이다.

또한 여야가 작년 총선·대선을 치르면서 국민들 앞에서 앞다퉈 약속했던 정치쇄신 과제들은 대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감 무소식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헌정회의 연금제 개선, 국회 폭력 방지, 인사청문회 개

선 등 4대 현안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쉽게 합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을(乙)을 위한 광주선언'에서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엄정하고 신뢰받는 정치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입법경쟁이 정책경쟁이 아닌 정치싸움으로 변질될 조짐이 보인다. 새정치를 표방했지만 많은 국민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조차 진흙탕 싸움이나 벌이는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국민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6월 국회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겠다고 합창하듯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정치쇄신을 이루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심의·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에게 약속한 기득권 회원의 겸직 금지, 헌정회의 연금제 개선, 국회 폭력 방지, 인사청문회 개

학교폭력 난무한데 광주교육청 뭐하냐

커질 만큼 비대해진 학교폭력의 해악은 이제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될 정도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광주에서만 하루 평균 11건의 학교폭력이 신고 된다고 한다.

본보에 따르면 경찰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117센터를 개소한 지 1주년이 됐는데, 광주지방경찰청에 서만 지난해 6월 개소 후 1년간 4천8건의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됐다. 하루 평균 10.9건이 신고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폭행·협박이 1천808건, 45%로 가장 많았고, 모욕 735건(18%), 질타상당 711건(17.7%), 공갈·갈취 270건(6.7%), 음담 237건(5.9%), 강요·괴롭힘 84건(2.1%), 성폭행 64건(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마 신고를 하지 않은 건수까지 더하면 하루에 15건 이상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10명 중 3-4명은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도

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피해 학생 중 33.8%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이며, 25.8%는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가해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탓에 학교 현장에서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스마트폰 메신저의 발달로 보이지 않는 집단 따돌림, 욕설 등의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시점에서 학교폭력을 막으려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형국이 되 버렸다.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에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도 높다. 학생들이 최근 발표한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10명 중 3-4명은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도

독자투고

농산물 도난방지 자위방범체계 구축해야

지난 14일 대구에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화물차 50대와 농산물(시가 4억3천여만원)을 훔친 절도범이 검거됐다. 매년 지역 농가에서는 이맘때쯤이면 좌불안석이다. 최근 가격이 높은 양파, 마늘 등 농산물 생산이 본격화되고 특히 노상에 야적돼 야간 도난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 틈을 노린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마늘이나 양파 특성상 밭이나 도로변 등에서 일장기나 야적해서 건조시켜야 하기 때문에 절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들녘에서 건조 중인 농산물은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 놓은 격으로 절도범들의 사각대에 노출돼 있어 농민들은 늘 불안하기만 하다.

최근 농산물 절도행각의 경우, 거의 중개상들에게 포진(발매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중개상을 가장해 마치 자기 소유인 양 행세하며 트럭까지 동원해 타인의 밭에 양파와 마늘을 싣고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양파 등 농산물 절도는 범인이 남기고 간 흔적이 거의 없어 검거에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만큼 농민들의 상실감도 크다.

이처럼 농산물 절도범죄는 농심을 멍들게 하고 인심까지 흉흉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범죄로서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도난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야간 형사기동 순찰팀을 운영하고 지역경찰에서는 농산물 도난예방 마을연합 홍보 및 목검문 등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농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출입하는 의심차량 등 수상한 차량 발견 시에는 운전자 인상착의나 차량번호를 기록해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방범 시설물이 허술한 곳은 없는지, 평소 건조장의 문단속은 잘 되어 있는지, 중요한 곳은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경이 협력하는 자위방범체계 구축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한다.

/김도연·영암 확산파출소 3팀장

<p>◀ 광주 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idaily.com</p>	
<p>회 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쇄인 徐榮振 주 필 南成淑 편집국장 朴俊洙</p>	<p>503-020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21번지 대표전화 (062) 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 650-2022</p>
<p>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취재부 650-2060</p>	<p>광고 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16</p>
<p>정치부 650-2030 문화체육부 650-2067 기획 650-2010 편집국 650-2017</p>	<p>광고국 650-2016 광고국 650-2017</p>
<p>경제부 650-2050 사 진 부 650-2080</p>	<p>법 른 국 650-2021 업무국 650-2019</p>
<p>사회부 650-2040 논 설 실 650-2006</p>	<p>서 울 지 사 (02) 786-9488</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광주가10(제)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p>	

전국 지방 5개사 공동칼럼 열린세상

정운현 국민TV 보도·편성 이사



스노든의 폭로와 '빅브라더'

일 발표한 작품이다. 미 언론들은 '빅 브라더(Big Brother)'를 연상시키는 이번 미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파문과 '1984' 출간 기념일이 묘하게 겹쳤다면 그 여파로 독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사회를 통제하는 거대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묘사한 작품으로 '빅브라더'라는 용어는 이 책에서 유래했다. '빅브라더'는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를 뜻하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 권력자들이 정보독점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미국, 일본 등 20여 개 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매년 '빅브라더상'을 시상해오고 있는데 이는 정부나 기업의 국민 사생활 침해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5년 국내에서 처음 열린 '빅 브라더상' 수상자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정보통신부, 삼성SDI 등이 선정됐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범죄와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분하에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영국은 180만대에 달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심지어 모자가 달린 운동복을 입지 못하게 할 정도다. '가디언'은 지난해 영국 정부가 전 화통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소위 '애국법(Patriot Act)'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손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 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정보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과거 국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의 통화를 불법 도·감청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 최근 국정원은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감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게시물 읽기와 쓰기 등 인터넷상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이 감청허가서를 발급할 경우 특정 회선을 통한 웹서핑, 이메일 등을 한꺼번에 감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회선을 이용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이후 '표현의 자유' 제약은 물론 공권력에 의한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 경찰에 자동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찍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다면 자유는 물론 안전도 누릴 수 없다"고 설교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국가주의'가 팽배하면서 한국도 이미 '빅브라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기고



박동희 광주시 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 해법은 '창조적 융합'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성장산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간 융합', '경영과 근로 간 창조적 융합', '복지와 고용의 융합'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성장산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간 융합이다.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콘텐츠)웨어를 거쳐 산업 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광주시는 광, 자동차, 금융 등 지역 제조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간 융합이 활성화되도록 광주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 R&D기관을 통해 지역기업에 융합기술을 지원하고 기업간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문화콘텐츠, 광·IT 등 매년 기업 맞춤형 융합인력 200여명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확대해 가고 있다.

둘째, 경영과 근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일자리 보태기·나누기다. 2011년 는 등 경제성장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은

D국가 중 1위로 OECD평균(1천776시간)의 119%수준인 2천116시간이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기업 종사자의 창의력과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이 된다.

광주시는 공공부문이 시민편익향상과 연계한 일자리나누기를 선도하여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셋째, 복지와 고용의 융합이다. 고용과 복지, 즉 사회보장은 한 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유럽 등 복지선진 국가에서는 복지정책의 중심에 고용을 두는 고용연계 복지(workfare)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자본이 아닌 인간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핀란드의 공적 취업지원센터, 호주의 복지·고용서비스 통합지원체계 센터링크(Centrelink) 등은 그 좋은 예로 복지의 정책적 수단으로 일자리 제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한시적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취업교육을 실시하

는 등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익추구가 절대적 가치인 자본 중심의 경제체제를 보완하는 제도도 공동체적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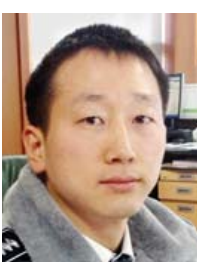
광주시는 민선5기 들어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346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4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4년까지 추가적으로 322개 조직 설립을 지원해 사회적 경제 활동조직 668개 육성으로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5개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두 번째(맞춤형 고용·복지) 목표가 일자리이고 광주시 민선5기 시정운영의 핵심과제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신성장 체제 구축'으로 일자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정책 지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일자리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산업계, 노동계, 학계, 유관기관·단체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착한 소비, 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 형성,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대상으로 매월 취업교육을 실시하

독자투고

'아동안전지도' 활용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신창용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안전지도'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중인데 아직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 되지 않고 있다.

아동안전지도란 경찰, 시청, 성폭력상담소, 초등학생이 함께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500m내외를 직접 순찰하면서 위험한 장소와 안전장소 구분, 이를 학생들이 직접 지도에 표시해 어린이들 스스로 위험 장소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 성폭력, 납치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지도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과정은 5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에서는 전문 강사가 교육대상 학교 주변을 사전에 현장조사 한 후 2단계로 범죄 예방 등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3단계로 안전지도 및 공간 판별법을 교육하고 4단계로 학생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지도를 제작한 후 5단계로 다른 아동들과 발표를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는 각 시·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도에는 학교 500m범위 내 경찰서와 파출소, 주민센터, CCTV 같은 방범시설의 위치가 상세히 표시된다.

학생들은 안전지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관리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은 재학생이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안전지도 제작이 아동대상 범죄 예방과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에서는 제작된 지도를 활용해 경찰관들의 순찰지역을 지정하는 등 지역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생활의 경험,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속 세상 60여 년 만에 전투현장 찾은 노병



18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저격능선 전적비를 찾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노병이 참전 당시의 사진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